



기업, 대선 정국 속 ‘임단협’ 고심 노조, 공약 업고 압박수위 높인다

현대차·포스코·한화오션 등 노조
임금·성과급 인상 요구 잇따라
정년연장·주4.5일제도 포함돼
사측 “글로벌 위기” 난색 표명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나선 주요 대기업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노조가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운 가운데 사측은 미국 관세 폭탄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노조가 내세운 요구안이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리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지난해 실적이 양호했던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과 성과급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 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또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전년도 말(최장 64세)로 연장할 것도 제안했다.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와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고, 직군·직무별 수당을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뉴시스

인상 또는 신설하는 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을 14만1300원 인상하는 동시에 당기순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5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요구안을 내놴다. 이런 요구안이 현실화할 경우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성과급과 격려금이 지급돼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임금 8.25% 인상, 연봉 상한선 상향, 초과이익분배금(PS)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등을 요구 중이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발판으로 역대 가장 많은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올해 상당 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발주량이 증가하고 선가가 오르는 등 ‘슈퍼사이클’을 맞

은 조선업계도 비슷한 분위기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는 각각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안을 만들어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지난해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에 더불어 한화오션은 120만 원의 하계 휴가비 지급이 요구안에 추가됐다. 이 외에도 포스코와 대한항공 노조도 기본급 7.7% 인상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매년 주요 기업들의 임단협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대선(6월3일)과 맞물리면서 노조의 요구안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 노조가 요구한 주 4.5일과 정년 연장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퇴직후 재고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년 연장 이슈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측에서는 노조의 요구안 전체를 수용하진 않지만 새 정부의 핵심 공약과 맞닿을 경우 외면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는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 된다”며 “이같은 노사 갈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켜 미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은 올해 초 임단협을 마치고 노사가 협력을 통해 실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李 “서울대 10개·교사 정치” VS 金 “공동 학위제·AI교과서”

대선 후보 교육철학 격돌

공교육 강화 공감, 접근법은 달라
입시개편·사교육비는 원론 수준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 공약이 막판 유권자 표심을 흔들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교육 강화와 대학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세부 정책과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철학 차이를 드러냈다.

1일 공개된 양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공교육 내실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책임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또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학교 내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교육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교육행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화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하거나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 거버넌스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두 후보의 입장은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방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대 간 교수 및 강좌를 공유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서울대-지방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교육기회의 분산과 대학 간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의 필요성에는 양 후보 모두 공감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두고는 차이를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전국적으로 도입해 맞춤형 학습과 교사 업무 경감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가 아닌 선택적 교육자료로 제한하고, 별도로 공공 학습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양 후보 모두 본질적인 교육 현안으로 꼽히는 입시제도 개편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수시·정시 비율 조정,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킬러문항 문제 등 대입과 관련한 민감한 쟁점은 공약집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초·중·고3대상 수학성취도평가 의무화와 수준별 맞춤 수업을 골자로 한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지방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명품 공립 기숙학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격전지 뛰는 이재명, 텃밭 지키는 김문수

21대 대선, 막판 유세 총력전

수도권 집중 유세로 표심 공략

양 후보 모두 영남권 공약도 병행

3주간 이어졌던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일 마침표를 찍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서울에서 ‘피날레 유세’를 열 예정이다.

3주 가량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충청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공을 들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대경)·부울경을 가장 많이 찾았다. 대선 후보들의 동선은 그 자체가 선거 전

략이며, 현재 판세에 대한 가늠자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3·4·6면〉

1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의 동선을 살펴봤더니 모두 수도권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 그만큼 수도권이 격전지라는 의미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는 ‘중원 공략’을 위해 충청권을 총 6번 찾았고, 선거운동 초반에는 대경·부울경 지역을 도합 12번 방문했다. 이는 이 후보가 경북 출신이기도 하지만,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동진(東進)’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충청·대경·부울경 권역을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았

다. ‘텃밭’인 영남권을 꾸준히 찾은 것은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막고,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만 봐도, 양 진영의 기세를 가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 남부권, 충청권을 찾았다. 경기도는 유권자 수가 많고, 충청 지역은 ‘캐스팅 보터’ 지역이라 막판 굳히기에 나선 셈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우위를 점하는 지역은 이미 표 결집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의미다.

반면 김 후보는 같은 날 강원과 경북 동해안 일대를 집중 공략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행안부, 취임식 준비·윤 기록물 이관 속도…투표관리 만전

▲이준석 “완주 결승선 눈앞…이재명이 무시 못할 세력으로 키워달라”

/사진 뉴시스

▲나경원 “이재명 공포독재 5법, 대한민국 ‘동토’로 만들 것…김문수 선택해 총통독재 막아달라”

▲이재명 “‘준 보훈병원’ 도입해 유공자 건강 빈틈없이 살필 것”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 이유로 투표소에서 소란 일으키면 엄중 조치”

▲공항공사 노조, 민주당에 정책 제안 “안전 예산 현실화”